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3

제 [] 선택

1

1.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의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보다는 형식적·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A라고 한다. 하지만 합법성을 갖춘 법률이라도 그 목적이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 실질적 정의에도 합치해야 한다고 보는 B가 등장하였다.

- ①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 ② B는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존재만을 요구할 뿐 그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 ③ A와 달리 B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위헌 법률 심사제 도입을 옹호한다.
- ⑤ A, B 모두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이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 ①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② 국제법을 존중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 ③ 남북 분단 상황을 반영한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원리이다.
- ④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3.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3점]

○○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A가 사무 집행을 위법하게 하였기에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민들이 주민 소환 청구를 예고하며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가진 B는 이번 사례가 주민 소환 청구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도 운영에 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A의 행정 사무에 대한 견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① A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권을 가진다.
-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 ③ B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방 자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A는 의결 기관, B는 집행 기관이다.
- ⑤ A,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4.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형태이며,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었다. t ~ t+3 시기 중 정부 형태는 2회 변경되었다. 표는 갑국의 시기별 각 정당의 의회 의석률을 나타낸다.

(단위: %)

구분	t 시기	t+1 시기	t+2 시기	t+3 시기
A당	25	56	33	59
B당	61	30	54	28
C당	10	8	8	9
D당	4	6	5	4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고, t+3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함.

- ① t 시기에 의회 의원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② t+3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히 보장된다.
- ③ t+1 시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B당이라면, t+1 시기의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④ t+1 시기와 t+3 시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다르다면, t+1 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⑤ t+2 시기와 t+3 시기의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동일하다면, t+2 시기에 연립 내각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5.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아나운서: 의회 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최근 주요 활동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갑: 저는 이주 노동자 차별의 심각성에 공감하여 시민들이 연대한 인권 보호 단체인 A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주 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이 요구되면서 B의 공천을 받아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이주 노동자 임금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추진해 왔는데,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C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여 해당 법률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 ① A는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 ② B는 정치적 책임을 진다.
- ③ B는 구성원들의 특수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 ④ C는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⑤ C는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정치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중학교를 졸업한 갑(15세)은 고등학교 입학 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대형 서점 사장 을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은 갑이 을과 체결한 근로 계약의 내용 중 일부이다.

1. 계약 기간: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 근무 장소: ○○대형 서점
3. 근무 내용: 신간 도서 정리
4. 조정 근로 시간: 10시 ~ 18시(휴게 시간: 12시 ~ 13시)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수 ~ 일요일) 근무/매주 월, 화요일 휴무
6. 임금
 - 시급: 9,500원
 - 지급 방법: 매월 10일, 20일에 갑 명의의 예금 통장에 입금

* 2024년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9,860원임.

- ① 갑은 을과 계약 시 고용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 ② 갑과 을이 합의할 경우 갑은 매 근무일에 1시간씩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 ③ 갑은 주말에 근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무일을 변경해야 한다.
- ④ 법정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체결된 근로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 전체가 무효이다.
- ⑤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다.

7. 밑줄 친 ㉠ ~ ㉣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고등학생 갑은 언론사에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담은 글을 투고하였습니다. 이에 공감한 ㉡ ○○시민 단체는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후 ㉢ 의회에서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의회에서 발의된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관련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 정부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간 교육 단체는 해당 정책 덕분에 ㉥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보기 >

- ㄱ. ㉠, ㉡은 모두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 ㄴ. ㉢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한다.
- ㄷ. ㉣은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ㄹ. ㉤은 정치 과정에서 ㉥에 대한 산출에 해당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17세)은 가방 매장을 운영하는 을(31세)과 법정 대리인 정 의 동의 없이 고가의 가방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갑과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으나 다음 날 알게 되었다. 한편 갑은 병(27세)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자신의 용돈으로 가방에 부착할 저렴한 액세서리를 구입하였다.

< 보기 >

- ㄱ. 을은 갑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할 수 없다.
- ㄴ. 을은 정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ㄷ.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신분증을 위조하여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이다.
- ㄹ. 갑은 정 의 동의가 없어도 병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존재이기에 국가 간 갈등이 필연적이므로 국가가 힘을 길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본다. 이에 반해 B는 인간이 이성적이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국가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충돌하는 이익 간 조화와 균형을 모색한다고 본다.

- ① A는 국제 사회가 보편적 선(善)에 의해 지배된다고 본다.
- ② A는 국제 사회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국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③ B는 집단 안보 체제를 국제 평화의 실현 방안으로 본다.
- ④ B는 개별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⑤ A는 B에 비해 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법을 다시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갑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형법 제35조가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형을 가중하여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A에 (가)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A가 갑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형법 제3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나)을/를 B에 청구하였다. B는 형벌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은 범죄 예방 및 사회 방위에 기인한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갑이 청구한 (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유형의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② A는 권한 쟁의 심판권을 가진다.
- ③ B의 결정으로 형법 제35조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④ B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⑤ A는 갑의 제청 신청이 없더라도 B에 (가)를 제청할 수 있다.

11. 기본권 유형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국내 여행사는 ○○부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 여행사는 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로 지정되었다가 갱신 기준 미달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 여행사 대표는 “갑국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의 국내 관광 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를 ○○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은 국민이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 A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①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③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권리이다.
- ④ 국민이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국가의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갑은 을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었질러 손님 병에게 화상을 입혔다. 한편 병의 자녀 정(14세)은 카페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주차된 무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자동차 범퍼가 망가지면서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 여행을 가게 된 A는 반려견 호텔을 운영하는 B와 여행 기간 동안 자신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돌봐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가 A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잠시 휴대폰을 보는 사이에 반려견이 행인 C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고 이에 놀란 C가 반려견을 건어차 다치게 하였다.

- ① 갑과 을은 병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② 을의 병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정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병은 무에게 정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A는 B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C에 대한 B의 불법 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A는 C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3. 밑줄 친 ‘A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과거 ○○법은 미성년자에게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확정될 수 없는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잔인성’의 의미를 알기 어렵고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표현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A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 ① 범죄와 형벌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②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범죄와 형벌이 의회가 제정하는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⑤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을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금고 6월을 선고받았다.
○ 병은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 정은 직무 처리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보 기 >

ㄱ. 갑은 교정 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ㄴ. 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ㄷ. 병은 보안 처분을 선고받지 않았다.
ㄹ. 정은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하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 (나)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다음 사례를 읽고 모둠별로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옳으면 ‘○’, 틀리면 ‘×’로 칠판에 답변을 표시하세요.

갑과 을은 혼인하여 자녀 A를 낳고 살다가 을이 A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병과 정은 혼인하여 자녀 없이 살다가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후 을과 병은 법률상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서 B가 태어났으며, 병은 A가 19세가 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양자로 입양하였다. 또한 을과 병은 병의 친구인 무의 자녀 C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변	
	1모둠	2모둠
병이 A를 입양한 후에도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	×
병과 정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
(가)	○	×
(나)	×	○

1모둠과 2모둠 각각 2개씩 정답을 맞췄네요.



< 보 기 >

ㄱ. (가) -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 받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가) - 입양으로 인해 A는 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병은 A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ㄷ. (나) - 무가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C는 무가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ㄹ. (나) - 병이 전 재산을 ◇◇ 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효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다면, B, 정은 모두 ◇◇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학생: 얼마 전 신문에서 ○○기업의 공장 폐수가 흘러나와 근처 어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기업은 폐수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민들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사: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어민들은 ○○기업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과 관계뿐 아니라 가해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A에 따라 귀책 사유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A에 부합한다.
- ② A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③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④ 개인이 국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⑤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A가 적용된다.

17. 밑줄 친 ㉠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 수사를 받은 후 ㉡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징역 10월에 ㉢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은 항소하였고, 항소심 결과 갑에 대한 ㉣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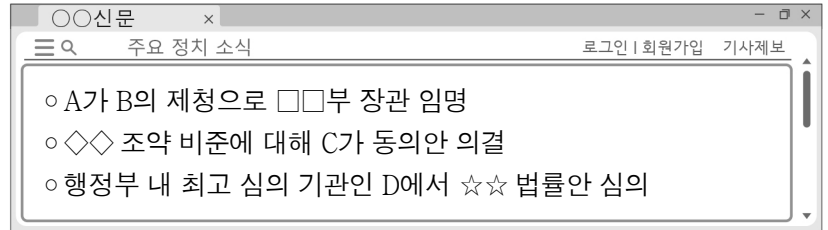
- ① ㉠ 과정에서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
- ② ㉡ 이후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으로 인해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은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⑤ ㉣ 이후 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이 을국 내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군사 활동을 전개하여 양국 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을국은 A에 갑국을 제소하였고, A는 갑국이 을국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를 갑국이 불복하자, 을국이 갑국의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안건을 B에 상정하였으나 갑국은 B의 상임 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을국은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C에 갑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 ① A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② A는 국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 ③ B는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의결 기관이다.
- ④ C에서는 표결 시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한다.
- ⑤ B의 모든 이사국은 C에서 정기적으로 선출된다.

1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D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 ② A가 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B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B는 A에게 국무 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④ C는 D의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C의 의장은 A이고, 부의장은 B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의 의회는 t기, t+1기 모두 지역구 의원 300인과 비례 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갑국에서는 t기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t+1기에 새로운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비례 대표 의석은 t기와 t+1기 모두 정당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자료 1>은 갑국의 시기별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이고, <자료 2>는 갑국의 시기별 선거 결과이다.

<자료 1>

구분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
t기	전국을 300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별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인을 선출함.
t+1기	선거구를 통합하여 전국을 100개의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별 많은 표를 얻은 순으로 후보자 3인을 선출함.

<자료 2>

구분	t기		t+1기	
	지역구 의석수(석)	정당 투표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석)	정당 투표 득표율(%)
A당	250	66	150	50
B당	50	22	90	30
C당	0	8	50	14
D당	0	4	10	6
합계	300	100	300	100

* t기, t+1기 모두 정당은 A ~ D당만 존재하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며, 무소속 출마자는 없음.

** 투표율은 100%이며, 무효표는 없음.

<보기>

ㄱ. t+1기와 달리 t기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ㄴ. t기, t+1기 모두 A당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다.
ㄷ. t기에 B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비례 대표 의석률보다 높다.
ㄹ. t기에 C, D당 모두 정당 투표 득표율보다 총의석률이 낮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